

민주,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 원칙' 제시

국회 정상화 협상 막판 진통...민주당 제안, 돌파구 주목 '靑-여야대표 회동' 한국당, 교섭단체 3당 고수로 이견

여야는 4일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6월 임시 국회 가동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의 최대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 방향이다. 그동안 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각각 '합의처리 노력', '합의처리'를 고수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처리 원칙'이라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했다. 한국당의 비협조로 산더미로 쌓인 민생 현안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강화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만 수용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고수한 '합의처리 노력'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에 대해 (한국당이) 가능성만 열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파행과 정국 경색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며 책임을 퍼부었다. 청와대의 '강한 입김' 때문에 여당과

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겹돌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어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추경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점을 거론, "정국이 교통체증을 겪는 이유는 날치기 선거법 사고, 공수처 강행 사고 등 문 대통령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청와대를 갈등 제조기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민주당의 수정 제안에 대해 "(연락받은 것은) 전혀 없다"며 "제안을 저에게 해야지 왜 언론에 하느냐, 진정성이 없어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회동 형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 경색 정국을 타개할 방안으로 다시 거론됐다. 청와대가 최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및 '문 대통령과 한

국당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 동시 추진을 새롭게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데 이어 '동시 회담'의 날짜로 "7일 오후"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후 '문 대통령-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 후 일대일 회담'을 역제안했다. 여기에는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범여권 정당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 정당을 뺀 회동이 논의 구도상 한국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평화당과 정의당을 뺀 3당 대표 회동에는 부정적이어서 접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이 9일 북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하는 만큼 청와대가 회담 날짜로 제시한 7일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국회 파행이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하태경 징계' 격돌

당권파 "노인혐하 일벌백계" vs 바른정당계 "윤리위 편파적"

바른미래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절차 착수를 놓고 또다시 돌로 나뉘어 충돌했다.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하 최고위원에 대한 '일벌백계'를 주장했지만,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한 반당권파는 윤리위가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맞섰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달 22일 임시최고위원회의에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다가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손 대표 측근인 이찬열 의원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하 최고위원의 어르신 혐하 발언은 도를 넘는 막말"이라며 "그간 당내 회의에서 나온 인격 살인성 막말은 기가 막힐 지경이고 이는 당 이미지가 추락하는 돌탄대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당원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안을 단호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유승민 의원은 꼭두각시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

아가라"고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바른정당계 분들이 다른 야당이 집회하는 곳에 가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다 하는 충정에 나온 말"이라며 "일부 지나친 내용이 있었다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언을 마치기 무섭게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집단 반발했다. 특히 윤리위가 하 최고위원과는 달리 의원의 발언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편파적 시비가 붙었다.

이해찬 의원은 "이찬열 의원은 징계 면제돼야 하고 하 최고위원은 징계돼야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하 최고위원의 발언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해당행위로는 볼 수 없고, 본인 스스로 3번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약 1시간 40분간 비공개 의회에서 안철수계 일부 의원들이 제안한 '정병국 혁신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연합뉴스

"상대 진영 향한 증오 없었으면...나라일엔 협력해야"

유시민-홍준표 토론패들 100분 분량 유튜브 공개 각 사안마다 의견 팽팽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3일 유튜브 공동방송을 통해 공개 '토론패들'을 벌였다. 사진은 이날 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녹화영상. /연합뉴스

진보와 보수의 대표 논객으로 꼽히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3일 유튜브 공동방송 '홍카레오'에 출연, 토론패들을 벌였지만 대부분 주제를 놓고 팽팽선을 달렸다.

두 논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서 100분 분량으로 녹화한 방송을 오후 10시 유튜브 채널인 '유시민의 알라레오'와 'TV홍카레오'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

이날 홍 전 대표는 "좌파와 우파가 증오의 목소리로 서로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해방 직후의 혼란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유 이사장과 녹화를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에 "유 이사장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반대 진영과 분노와 증오만 표출하는 것이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시민문화제를 할 때 대극기 집회하는 분들이 5m 떨어진 곳에서 사자후를 토하더라"라며 "각자 자기주장하고 서로 휘방 놓지 않는 데까지 오는 데 70년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보수와 진보'라는 주제를 놓고도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홍 전 대표는 "보수의 기본 가치는 자유이고, 진보의 기본 가치는

평등"이라며 "그것을 서로 조화시키고 양립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보수 쪽에서 자기들이 집권할 때 개인의 자유를 제약했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원하게 인정하고 지금 확실하게 자유의 가치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개별 상태까지 오게 된 배경은 탄핵"이라며

"지금도 보수 우파는 탄핵을 두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제 탄핵 때 어떻게 했다고 논쟁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 수 있느냐고 문재인 정부에 따지고, 잘하는 건 협조해줘야 한다.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비핵화 해법은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유 이사장은 "체제 안전

이 다른 방법으로 보장된다면 북한이 굳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지금도 북한 권력층을 완전 비이성적이고 괴물 같은 집단으로 보면 해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전 대표는 "이런 체제가 보장 가치 있는 체제인가"라며 "핵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바로 무너진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해찬, 장관 18명과 릴레이 오찬

교육부·문체부 등 국정 현안 인식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정부 사회분야 부처 장관들과 오찬을 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시급한 현안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표는 이날 정오에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점심을 함께하며 국정과제와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 대표가 18개 부처 장관들을 만나는 '릴레이 오찬'의 시작으로, 당에서는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재정 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변인은 한 시간 넘게 이어진 비

공개 오찬 후 기자들에게 "(장관들이) 국회 정상화를 통한 조속히 추경 통과를 요청한 것이 대부분의 말씀이었다"며 "추경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시급성을 장관들이 일일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은 "취약계층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애초 작년에 지급됐어야 했다"며 관련 내용이 추경안에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장관들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부처 관련 법안들을 언급하며 국회 정상화 관련 상황을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5일 외교·통일·국방부, 7일 농림축산식품·환경·국토교통·해양수산부, 25일 법무·행정안전부 장관과 각각 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靑 통일정책비서관에 김창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에 김창수(55)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앞서 서호 전 통일정책비서관은 지난달 23일 통일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비서관은 광주동신고와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학 석사학위를 받고,



동국대에서 북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창밖 풍경
전원주택전경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660㎡, 건평: 83㎡, 매매가: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엘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엘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